

시론



최 광

- 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전 제14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 전 제34대 보건복지부 장관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민낯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너무나 자명하고 누구나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왜 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 땅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위세 부리는 민주화 세력 그리고 ‘이게 나라냐?’고 항변하며 촛불을 들어 탄핵을 통해 박대통령을 축출하고 문대통령을 세운 촛불부대 두 집단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7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반인 근대 서구 시민정신과 시민사회의 형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도 없다. 해방공간에서 남쪽에서는 미국군정이 민주주의를 심었고 북쪽에선 소련군정이 전체주의를 강요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빌미로 정치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민주화 세력이라 자칭하는 일부 집단들이 반(反)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알면서 권력을 잡기위해 견강부회(牽強附會)하고 있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인류와 같이 한 역사는 매우 짧으며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반듯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민주주의는 아테

네에서 연유하는바 2500여 년 전 약 3만 명 정도의 가정을 소유한 성인 남성 자유시민만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아테네 전성기와 맞물려 있었던 제도이다.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 군주정, 귀족정, 전제정, 과두정 등의 정치체제가 등장하여 지구상에서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 졌었다. 이후 2300여 년 만에 미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민주주의’는 영어의 ‘democracy’를 번역한 것이다. ‘democracy’는 어원적으로 다수 또는 떼를 뜻하는 ‘demos’와 지배체제 또는 통치를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이기에 ‘다수지배정치체제’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democracy란 단어 자체를 보면 ‘--ism(주의)’이 단어 속에 없는데 번역을 민주‘주의’라고 번역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구인들이 democracy란 말을 접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의미는 다수지배정치체제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각인된 엄숙하고 신성한 그 무엇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영어 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는 대신 ‘다수지배정치체제’로 번역·사용할 것을 학계에 제안하는 바이다.

민주정치체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민주정치체제를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제도,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신격화되어 숭앙한다는 것이다.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란 가장 나쁜 정부

의 형태다. 모든 다른 정부 형태를 제외한다면”이라고 했다. 성숙한 개인들의 독립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떼’의 정치, ‘폭도’의 정치가 되며 우중정치로 쉽게 흘러감을 많은 역사가 보여준다.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의 결과로 파시즘-나치즘이 탄생했고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가 등장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룰 것인가에 있었으며, ‘왜’ 민주주의이어야 하는가는 관심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 민주화를 위한 열렬한 투쟁이 있었지만, 정작 민주정치체제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에는 그만큼의 열정이 바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폭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한심한 민낯을 살펴보자.

첫 번째 민낯은 촛불혁명을 민주혁명이라 우기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촛불혁명에 의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을 숨기지 않으며 해외 순방에서 자랑을 일삼았다. 그러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혁명과 촛불혁명이 같은 것이라 했을 때 핀잔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에 대한 시민혁명이나, 근원에서 보면 촛불혁명은 정당한 합법적 정부를 광장정치가 뒤엎은 폭도혁명이다.

두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분립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업무협의를 핑계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직원이 국회에 파견되는 것은 3권 분립의 정면 위반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헌데 입법부의 여당은 행정부의 시녀가 된지 오래이다. 탄핵소추가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사법부 소속 판사들이 다른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했다. 최근엔 선거부정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조차 입법부의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월권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세 번째 민낯은 일부이긴 하나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당독제 전체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칭송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일당 독재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가?

네 번째 민낯은 유명선거가 빈번히 이뤄지는 현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의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의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되어 왔다. 당 내부 선거에서 여론조사 활용은 민주

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킨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들어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다. 여론조사는 아무리 정치(精緻)하게 이뤄지더라도 유권자의 자격 여부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절차이다.

다섯 번째 민낯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되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여론 조사로 결정하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들도 필요 없다. 국민의 민의는 국회를 통해 수렴되는 것이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수렴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고 이 민심 천심이 곧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대중이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3대에 걸친 진짜 일인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침묵을 넘어 찬양하는 희극이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연출되고 있다. 민주정치체제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해 기본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